對탄도탄 요격 미사일 '천궁-II' 본격 양산

LIG넥스원, 2023년까지 4390억원 규모… 성능 탁월 해외수출 가능성 커

지난달부터 두 차례 걸쳐 국방기술품질원 주관 품질인증 사격 진행 완료

국내 자체 기술로 개발된 대(對) 탄도탄 요격 미사일 체계 '천궁 Ⅱ' 양산품의 성능을 검증하는 품질인증사격이 성공적으로 완료, 본격적인 양산체계에 돌입했다.

LIG넥스원은 지난 18일 국방기술품질원 주관으로 진행된 천궁 Ⅱ 품질인증 사격이 성공적으로 완료됐다고 20일 밝혔다.

'천궁 Ⅱ'는 탄도탄 및 항공기 공격에 동시 대응하기 위해 국내기술로 개발된 중거리·중고도 요격체계이다. 2012년부터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개발, 다수의 시험발사에서 100% 명중률을 기록하며 2017년 적합 판정을 받았다. 지난해 11월 첫 출하 및 군 인도가 진행된 바 있다.

또한 7월 21일과 8월 18일 두 차례에 걸쳐 연구개발 단계에서 충족된 국내 개발 유도무기의 성능이 양산품에서도 동일하게 구현되었는지를 확인하는 '품질인증 사격시험'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2023년까지 4390억원 규모의 '천궁 Ⅱ' 양산사업이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탄도탄 요격체계는 전 세계적으로 일부 선진 국가에서만 개발에 성공한 최첨단 유도무기이다. '천궁 Ⅱ'에는 효과적인 탄도탄 요격을 위한 교전 통제, 탄도탄 추적 등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들이 적용됐다. 국내 국방 R&D 역량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천궁 Ⅱ'는 탁월한 작전성능으로 해외시장에서도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만큼, 향후 수출 가능성도 높다. 또한 배치 후 성능개량 및 창정비 요소 등을 고려할 때, 해외 도입장비에 비해 국방예산 절감은 물론 더욱 신속하고 안정적인 유지보수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LIG넥스원 김지찬 대표이사는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을 비롯한 많은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품질인증 사격을 마무리했다"며 "본격 양산체계에 돌입한 천궁 Ⅱ가 대한민국의 하늘을 지키는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일정 및 품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시스

전북도의회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전북형 그린뉴딜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19일과 20일 정책세미나를 개최하고,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등 무더운 휴가철에도 분주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탄소중립 실현 그린뉴딜 정책방향 모색

도의회, 에너지정보플랫폼 주제 정책세미나… 전주에너지센터 등 현장 방문

전북도의회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전북형 그린뉴딜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19일과 20일 정책세미나를 개최하고,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등 무더운 휴가철에도 분주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도의회 그린뉴딜연구회(대표의원 국주영은)는 지난 19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그린뉴딜TF와 공동으로, 지역에너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에너지정보플랫폼에 관한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가졌다.

첫 발제자로 나선 김연지 서울시 환경시민협력과장은 "시·군별 통합 에너지 정보제공으로 지역에너지 정보를 한눈에 관찰할 수 있는 플랫폼을 통해 에너지 자립 및 절감 효과 증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광역시.도의원의 역할'이란 주제로 발제에 나선 녹색전환연구소 이유진 박사는 "탄소중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공정하고 정의로운 탄소중립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탄소중립 이행에 필수적인 사항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 및 기후변화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구회 대표의원인 국주영은 의원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산업계, 노동계, 시민사회, 미래세대를 포함한 일반 국민의 의견수렴이 중요하며, 지자체가 해야 할 역할과 책무도 매우 중요하다"라며 지방행정의 적극적인 자세를 주문했다.

다음날인 20일, 연구회는 전북의 그린뉴딜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전주에너지센터'와 완주의 '전환기술 사회적협동조합'을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해법 찾기에 나섰다.

'전주에너지센터'는 에너지 자립도시를 만들기 위한 에너지 절약, 효율, 생산 분야 시민참여 사업을 추진하는 중간지원조직으로써 연구회는 센터에서 추진한 '시민햇빛발전소'를 찾아 태양광 사업현장을 둘러봤다.

이어, 연구회는 지속가능한 생태사회를 위해 필요한 적정기술의 연구, 개발, 교육 등의 사업을 펼치는 완주 전환기술 협동조합을 방문했다.

국주영은 의원은 "농촌마을에 필요한 생활기술과 열린공방 등을 돌아보면서 화석연료와 핵에너지에 최적화된 현대사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에너지 자립 프로젝트와 에너지전환의 필요성에 공감했다"며 소회를 밝혔다. /유호상 기자

도 "산림조합 운영 벌초 도우미 서비스 이용을"

벌초 이동인구 최소화 위해… 추석 전까지 접수 마무리 예정

전북도가 추석명절 대비 벌초 이동인구 최소화를 위해 산림조합에서 운영 중인 '벌초 도우미 서비스'를 적극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벌초 도우미 서비스'는 묘지가 소재한 각 지역 산림조합에 전화 또는 직접 방문 접수하거나, 인터넷(http://iforest.nfcf.or.kr), 모바일(m.nfcf.or.kr) 등 다양한 채널을 이용해 신청하면 된다.

사용료는 현지 여건을 반영한 각 조합별 자체 기준으로 기준 단가를 적용해 면적, 거리, 묘지의 수, 주변여건 등에 따라 추가 수수료가 발생한다.

산림조합원(지역 불문)의 경우 10%, 3년 이상 연속 벌초 의뢰할 경우 5% 할인을 제공하기도 한다.

산림조합은 산림분야 전문기관으로서 벌초, 잔디 보수, 훼손지 복구와 묘지 조경 등 묘지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위성항법장치(GPS) 및 묘지이력관리시스템으로 실묘(失墓)를 방지함은 물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묘지관리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도내 산림조합 벌초도우미 서비스 추진실적은 2019년 4,036건, 2020년 5,394건으로 해마다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다.

올해도 많이 접수되고 있으며, 이용자 증가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접수 건은 추석 전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허전 도 환경녹지국장은 "코로나19 지역 확산 방지를 위해 모임 및 이동을 최소화해야 한다"라며 "산림조합의 벌초·묘지관리 대행 서비스는 비대면으로 진행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은 물론, 전문성을 보증하는 서비스이므로 최대한 이용해달라"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도,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 방역실태 점검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해

전북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군과 점검반을 구성,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 21개소를 대상으로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적용에 따라, 대규모 점포의 전자출입명부(QR코드), 안심콜, 수기 명부 등 출입명부 관리가 의무화된 데에 따른 조치다.

그간 대형점포는 매장 내 개별점포에서 출입명부를 따로 관리했으나, 매장 자체는 유동 인구 및 출입구가 많아 방역관리에 애로가 있어 출입명부 관리를 의무화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백화점 집단감염을 계기로 역학조사를 위한 출입명부 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돼 중수본에서 출입명부 작성을 의무화했다.

도내 대규모 점포는 백화점 1개소, 대형마트 14개소, 쇼핑센터 6개소 등 총 21개소다.

점검반은 출입명부 작성, 방역책임자 지정,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시식 금지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또한, 출입명부 작성 조치가 실효성 있게 정착될 수 있도록 담당 관리자 면담을 통해 출입구별 교대 인력배치 등을 계도할 계획이다.

도는 방역 조치를 위반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및 10일 이내 운영 중단 등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정석 도 일자리경제정책관은 "고객 밀집도가 높은 대규모 점포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따른 강화된 방역기준을 철저히 적용해줄 것"을 당부하며 "방문객이 많은 대규모 점포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집단감염 우려가 있는 만큼 방역 수칙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도, 다중이용 낚시어선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전북도가 낚시어선 사고 예방을 위해 23일부터 9월 30일까지 39일간 다중이용선박에 해당하는 낚시어선을 대상으로 국가안전대진단을 진행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도와 시?군, 해양경찰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수협중앙회, 낚시어선협회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으로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승선정원 13인 이상 낚시어선 51척(군산시41, 부안군10)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안전설비(구명조끼, 통신기기, 화재경보장치 등) 구비 및 작동상태, 전문교육 이수 여부, 출입항 신고 이행여부, 승선자명부 작성 여부 등이다.

특히,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강화됨에 따라, 안전점검과 함께 생활속 거리두기 지침 준수 여부 및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코로나19 방역지침 이행 여부도 점검할 예정이다.

안전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중대한 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과 맞지 않는 제도와 관행 등도 적극 발굴해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윤동욱 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이번 낚시어선 국가안전대진단을 계기로, 낚시어선업자와 승객의 안전의식을 한층 높이고 안전한 낚시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마스크 착용 '필수'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지난 20일 익산시 중앙시장 수해현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중앙동 침수피해 지원 방안 찾을 것"

익산 방문 정 전 총리 정부·국회 차원 지원책 마련 의지 표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정세균 전 총리가 전북 익산지역의 침수피해 회복을 위한 정부·국회 차원의 지원 방안 마련 의지를 표명했다.

정세균 전 총리는 지난 20일 익산시 중앙동 상가지역을 찾아 상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약속했다.

중앙동 상가지역은 지난 7월 5일과 8일 두 차례의 집중호우로 300여개의 상가가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다.

정 전 총리는 상인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침수 피해 극복을 위한 익산시와 시의회, 상인, 시민들의 역량 결집을 응원하며 지원책 마련 의지를 드러냈다.

정 전 총리는 "올해는 코로나19에 수해까지 가혹한 한 해"라며 "침수피해 극복을 위한 민관의 협력, 자원봉사자들의 노력, 성금 모금, 현장 상인들이 힘을 내는 것 보고 익산시민은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김수흥·한병도)의원과 시장, 시의장 등이 힘을 보탠 덕분이라고 생각한다"며 "응급조치를 잘했다고 평가하며 사후 관리를 잘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또 "국회나 정부 차원에서 도울 일을 김수흥 의원과 함께 적극적으로 찾아 볼 것"이라고 말했다.

정 전 총리는 내주 예고된 남부지역의 비 소식을 언급하며 "비슷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전 총리는 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백신 예방접종의 중요성과 방역 수칙 준수도 주문했다.

정 전 총리는 "추석을 전후해 백신 접종의 상당한 진척이 기대된다"며 "방역수칙에 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총리 재직 당시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의 손실보상법을 제안해 국회 통과 후 시행령이 마련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정 전 총리는 이를 통해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됐으면 한다는 입장도 표현했다.

중앙동 침수피해 지원이 지난해 섬진강 수해 피해 복구의 더딘 지원의 반복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상인들의 우려에 정 전 총리는 "해당 사례는 익산의 사례와는 다르다"면서 "원인 규명을 위한 위원회에 광범위한 시간이 걸린 것으로 앞으로는 진척될 것"이라고 답했다.

또 "재직 당시 피해 지원을 위한 획기적인 개선을 이뤄냈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국회의원과 시장, 시의회와 함께 힘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정헌율 시장은 "손해사정인에 의해 피해 규모가 산정되고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객관적인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추석 농수산물 선물가액 한도 20만원으로 상향을"

"농어업인 도와야"… 시도지사협, 권익위에 건의

앞으로 다가올 명절 농수산물 소비 확대 효과 기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송하진)는 지난 20일 이번 추석을 맞아 '청탁금지법'상 농수산물 선물가액 한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해줄 것을 국민권익위원회에 공동 건의했다.

이번 건의는 코로나 4차 대유행과 한파·폭염 등 자연재해, 영농철 일손부족 까지 삼중고를 겪고 있는 농어업인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지사 긴급 협의를 거쳐 이뤄졌다.

특히, 농어민 단체에서도 선물가액 상향에 대한 요구가 커짐에 따라,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적극 호응해 17개 시도지사의 만장일치로 이번 건의가 추진됐다.

지난 2016년 9월 첫 시행된 '청탁금지법'은 선물가액 한도를 5만원으로 규정했으며, 2018.1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농수산물 선물가액 한도가 10만원으로 상향됐고, 작년 추석과 올 해 설 명절에는 20만원까지 한도를 상향한 바 있다.

선물가액 상향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도 상당한 것으로 분석됐다.

농식품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작년 추석의 경우, 전년대비 과일은 48.6%, 가공식품은 32.6% 소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올 설 명절에는 전년대비 과일은 25.6%, 축산물은 27.2%가 증가하는 등 선물가액 상향조치가 농수산물 소비확대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다음 주면 추석명절 기간 선물가액 상향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여 긴급히 의견을 모아 시도지사 간 합의를 이끌어냈다"면서 "우리나라의 300만 농업인과 660만 소상공인에게까지 지원효과를 냄으로써 민생경제 회복의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선물가액 상향 공동건의가 반영될 경우, 국무회의를 거쳐 개정된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한시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한달 앞으로 다가올 추석 명절 농수산물 소비 확대에 큰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유호상 기자